

정부 개헌시안 발표

與 탈당파도 반대...국회 통과 난망

정부가 8일 공식발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개헌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밑그림이다.

그러나 개헌의 추진 주체와 시점의 미묘성, 대선-총선 주기 일치에 따른 권력의 집중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개헌시안의 발표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 절차=일단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과 관련, 오는 1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관으로 헌법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 등 설명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계획이다.

이 같은 여론수렴을 토대로 정부는 3월말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한 뒤 공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헌 전망=그러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원내의석 127석의 제1당인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치적 슬 수'라고 강력 반발하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

공청회 여론 수렴 이달말 안 확정 상정 추진 주체·시점 미묘...정치권 논란 재연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개헌 추진을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집권여당 기능을 상실했다. 의석도 재적 3분의 1을 간신히 넘는 108석에 불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신당모임 등 우라당 탈당 그룹들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의 내부 기류도 '개헌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중심당과 민주노동당도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 개헌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임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도 '정치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빅3 "개헌 차기정권서"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는 8일 정부의 개헌시안 발표와 관련, "차기 정권에서 개헌해야 한다"며 현정권 임기내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를 방문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나도 그간 소신으로 (개헌을) 말해왔다"면서 "만약 내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하규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은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중지하고 민생을 한나라도 더 챙기는데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수원 공보실장이 전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오후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상열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보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당 중심 정계개편 정권 창출"

이상열 신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의 얼굴인 전남도당을 바로 세워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정계개편을 이루고 나아가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오후 보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이상열(목포) 의원은 "전남도당이 단합해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자"며 이같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남도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도당을 운영할 것"이라며 "통합 등 정계개편에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뜻깊은 사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있

다. 원내와 원내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당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혼란의 시기로 모두 단합해서 정계개편을 향해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변인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앙당에 올라가 두루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효투표 수 1천 25표 중 585표를 얻어 440표에 그친 국창근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위원장의 당선으로 원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평화·개혁세력 통합에 최선"

서갑원 신임 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최근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에게 임명된 서갑원 의원(순천)은 8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포함 사회단체의 역량있는 인물들이 대통합을 이뤄 신당을 창당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안고 있다"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홍업씨가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가 분명하다면 열린우리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여수엑스포유치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 위원장은 이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서

남해안 개발, 광안민권 개발 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당 운영 방향에 대해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적극 발굴,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개헌시안 주요 내용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맞추기 3개안 제시

대통령 권위 1년 미만엔 총리가 권한 대행

■ 개헌시안 주요내용

구분	개헌내용
1.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권위 시의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권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
3. 대통령 권위 시의 후임자 선출과 권한대행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4.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일치와 선거	제1안 : 2010년 2월 대선·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 (대통령 : 2012. 3. 31 - 국회의원 : 2012. 2. 28) 제2안 : 2012년 시차선거 (대선1월 / 총선 2월) 임기시작 (대통령 : 2012. 3. 31 - 국회의원 : 2012. 2. 28) 제3안 : 2008년 2월 대선·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 (대통령 : 2008. 2. 25 - 국회의원 : 2008. 2. 25) ※ 2012년부터는 제1안과 동일
5.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권위 확인	대통령이 사고·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때에 권위 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를 실시
6.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정부가 8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시안은 모두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주기 일치=이번 개헌을 통해 5년이던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줄어든다 해도 현행 주기대로라면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안에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부터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의에 앞선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도록 했다.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차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잦은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되, 올해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된 정치 일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과 동일하되, 차차기 대선(2012년 1월)과 총선(2012년 2월)의 시차를 1개월 뒀다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 안은 개헌의 취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 차기 대선과 총선을 내년 2월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권위시 후임자 선출=대통령이 권위를 경우 권위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단축, 1회에 한해 연임=개헌시안은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줄이고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70조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될 수 있다'로 바꿨다.

연달아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다의상의 중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다.

◇대통령 권위시 후임자 임기=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위시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재임토록 하는 내용(70조)을 명문화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권위'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www.gwanggijemyung.com

광명기업주식회사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광명기업주식회사

1. 채용부서 : 인사팀

2. 채용인원 : 10명

3. 채용대상 : 학력 : 대학 졸업 이상

4. 지원자격 : 1. 광명기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함

5. 지원기간 : 2007. 3. 12. 오후 5시까지

6. 지원방법 : 1. 지원서(2매) 작성 후, 2. 지원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신분증 사본, 7. 최근 2cm x 2cm 사진 2장

7. 면접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광명기업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 2층 인사팀

8. 면접시간 : 2007. 3. 12. 오후 2시

9. 면접방법 : 1. 서류면접, 2. 면접

10. 기타사항 : 1. 면접 합격 후, 2. 면접 합격 후, 3. 면접 합격 후, 4. 면접 합격 후, 5. 면접 합격 후, 6. 면접 합격 후, 7. 면접 합격 후, 8. 면접 합격 후, 9. 면접 합격 후, 10. 면접 합격 후

광명기업주식회사